

2024년 12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 고
안지연	12/1	[토요와이드]충간소음 해결 팔 걷은 광명시...전국 최초 지원센터 운영 [토요와이드]"바코드 가렸는데 털렸다"...기프티콘 무단 도용 주의	
임윤주	12/8	[뉴스특보]"국회·정당·집회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뉴스특보]"필로폰 음료 한잔 10만원"...외국인 클럽서 마약 파티	
김홍태	12/15	[뉴스특보]통치권, 누가 어떻게 행사?...오리무중 속 위험 비판도 [뉴스특보]계엄 사태에 코스피 하락 지속...탄핵 무산 후 향방은?	
안지연	12/22	[뉴스잇]"TV·유튜브 출연 아동 정서부담 심각, 아동 인권 보호해야" [뉴스특보]외신'탄핵 가결'긴급 타전...국회 안팎 생중계도	
최미연	12/29	[뉴스특보]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뉴스프라임]외교 공백에 직접 뛰는 기업들...'민간외교' 역할 부각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4 12/1(일)	안지연	지난 26일 뉴스리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유명 배우의 비혼 출산 인정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해 이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해 전했습니다. 비윤리적이라는 지적과 전통적 가족관 탈피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혼외자 규모가 이미 1만명을 넘어 지난해 전체 출생아 23만명 중 4.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40%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10년 전 22%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인식은 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춰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가과제로 저출생 위기가 떠오르면서 정부도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등을 테이블에 올려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비혼 출산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유명인의 사례를 통해 공론화했습니다. 전통적 가족관의 변화와 새로운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는데요, 국내 혼외자 증가와 20대의 인식 변화를 언급하며, 비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추후 보도에는 윤리적 논란이나 현실적 문제 등 보다 다양한 시각을 담아 보겠습니다.

		적·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며 미래지향적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도는 혼외자 비율과 인식 변화 등의 데이터를 통해 설득력을 더했으며, 프랑스 등록 동거혼 제도를 사례로 제시해 제도적 대안을 논의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 가족 개념을 재평가하고, 비혼 출산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보도는 비혼 출산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따른 현실적 문제나 윤리적 논란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법적 환경에서 프랑스식 제도를 수용하는 데 따른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면 더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담은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2024 12/8(일)	임윤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에 대해 보도한 <뉴스오늘> 살펴 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경찰 특수활동비는 31억 6천만원입니다. 경찰 특수활동비는 사건 수사 중에서도 마약이나 성범죄 등 기밀이 필요한 위장 수사에 주로 활용됩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마약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첩보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자료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무슨 돈으로 수사하	말씀하신대로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주어 없이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적 참고해서 자막 표기에 고려하겠습니다.

		<p>라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기초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 경찰청 예산안에 반영됐던 특수활동비 31억원도 최근 3년째 동결됐던 상황에서, 특수활동비를 활용해야만 하는 수사의 범위를 더 넓혀 놓은 국회가 오히려 수사를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 보도는 예산안에서 삭감된 경찰 특수활동비에 집중하여 전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해당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인용한 의견에서 취재원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따옴표를 활용하여 직접 인용처럼 보도한 부분입니다. 간혹 취재원 보호 등의 이유로 취재원의 신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직접 인용처럼 보이는 큰따옴표 사용 보다는 간접 인용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떤 인물이 언급한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화면은 물론 기사 제목과 하단 자막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요. 향후에는 보다 명확한 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p>	
2024 12/15(일)	김홍태	<p>지난 8일 뉴스특보에서는 계엄령부터 탄핵 소추 표결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데요, 탄핵이 무산된 가운데 금융시장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던 지난주 코스피는 사흘 연속 하락했는데요, 외국인 순매도 종목은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종에 집중됐으며, 매도 규모는 지</p>	<p>정부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워치해 보겠습니다.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외국인 매도와 이에 따른 개인 투자자 여파 등도 계속 관심을 두고 살펴볼 계획입니다.</p>

		<p>난 4일 2천551억원 등 사흘 동안 7천96억원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광상준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줄이고자 할 때 줄여야 되는 항목은 모든 주식을 조금씩 줄일 수도 있겠지만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수익을 냈던 은행 금융 증권 보험 쪽에 매도가 훨씬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주환원 정책이 후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 외에도 금융업종이 국가 안정성과 비례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금융업 외 외국인이 거둬들인 투자금을 모두 합치면 사흘 동안 1조 85억원 정도인데요, 외국인 매도세에 지난 사흘간 코스피는 267개, 코스닥은 686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주식시장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당분간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빠질만큼 빠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주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고착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가 비상사태와 탄핵소추 표결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전달하며, 현재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된 금융업종에 매도가 강하게 작용하는 원인도 인터뷰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주주환원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주식시장의 변화를 이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관련 배경과 앞으로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 논의도 필요해 보였습니다.</p>	
--	--	--	--

		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저가 기록, 원화 가치 하락 등이 실제로 개인 투자자나 실물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좀 더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의 긴급 경제대책회의 내용과 계획은 우선 간단히라도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2024 12/22(일)	안지연	<p>지난 13일 뉴스잇에서는 TV와 유튜브 등에 출연한 아동의 정서적 부담과 아동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방송 출연 빈도가 잦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안정망 부족이 지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어린이들이 부부갈등 예능프로그램 출연 등 시청률 경쟁 속에서 받아야 할 기본적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말을 덧붙였습니다.</p> <p>이 보도는 TV와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미디어 채널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했는데요, 최근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이들의 출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이 단순히 오락적 소재로 소비되지 않고 한 사람의 주체적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채널 출연 아동의 정서적 부담은 이들이 출연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는</p>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아동 인권 침해 사례나 실제 출연자의 경험을 제시했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해외의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참고해 대안을 제시해주었다면 시청자들이 폭넓은 시각으로 이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2024 12/29(일)	최미연	<p>지난 23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가 자율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될 경우의 부작용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할 우려를 이유로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부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교육평등 측면에서 특히 어려운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로부터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본</p>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싼 여러 내용과 논란 등은 이미 수차례 리포트를 통해 보도한 바 있고 향후에도 보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p>회의 통과 전까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디지털교과서 채택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기술 격차를 줄일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충분한 기술 지원이 없을 경우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 기사는 논쟁을 잘 전달했지만, 학습 효과의 장단점, 기술 격차, 디지털 의존성 완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성공·실패 사례 등의 보도가 추가된다면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4. 12. 01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7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묵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웃 간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 간 감정이 상하게 되거나 극단적인 범죄로 연결

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적 움직임이 필요한 때인데요,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 23일 토요일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주목했습니다. 보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가 극단적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관련 민원이 2019년 2만 6천여 건에서 지난해 3만 6천여 건으로 40% 가까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 광명시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센터를 통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광명시장의 설명을 덧붙였다. 보도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1, 2차 중재에 나서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 해소 자문위원회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하면서, 광명시는 관내 91개 공동주택 단지 중 78%에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층간소음 문제가 현대 도시 사회에서 이웃 간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자리 잡으며,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정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긴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감정적 대립과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빈번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 보도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역할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이웃 간의 갈등 해소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도시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보도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초점을 맞췄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이 담기지 않아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갈등 중재 시스템의 구체적 작동 방식이나 사례, 층간소음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적 또는 제도적 접근에 대한 정보가 더해졌다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편리함을 가져다줍니다. 기프트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이 그 예인데요, 지갑에 쿠폰을 넣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히 결제할 수 있다는 점과 정보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지닙니다. 이러한 상품권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 사례도 빈번하게 등장하는데요, 특히, 중고 거래 과정에서 바코드가 노출되어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모바일 상품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무단 도용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판매자는 중고거래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사기범으로 몰렸습니다. 판매자는 바코드를 인식할 수 없도록 덧칠해 판매 글을 올렸고 원본을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했지만, 이미 사용된 상품권이라는 항의를 받았는데, 경찰 수사 결과 중간에 누군가가 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상품권의 사진 밝기를 높이자 원래의 바코드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전하면서 상품권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바코드를 올리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바코드 도용은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사용 문제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기프트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보편화는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사기와 도용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보도는 중고 거래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거래 시 디지털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주의를 넘어, 디지털 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디지털 금융 환경의 취약점을 지적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안전한 디지털 거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 보도는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보안 기술 강화, 소비자 교육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첨단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보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5일 뉴스리뷰에서는 경찰이 올해에만 해외 기술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2년 12건에 이어 지난해 22건, 올해는 10월까지 해외 기술유출 25건을 적발해 가장 많은 검거 건수입니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1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기술 유출 사건 가운데 해외 유출 사건 비중은 올해 처음 20% 이상을 기록했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32%, 반도체가 28%로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6일 뉴스위치에서는 첨단 기술의 유출은 국가 안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는 삼성전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했는데,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에만 4조원 넘게 투입한 'D램 기술'을 전직 임원과 전 수석 연구원이 중국으로 빼돌려 구축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의 유출 사례는 전년 대비 5배 급증해 10건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국가적 위기로 변질 수 있어 정부 대응

강화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에서는 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현행 양형 기준 개정을 통해 피해 규모를 세분화 하는 등 실질적 개선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가정보원장의 의견과 기술유출 합동수사단 신설과 처벌 대상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두 보도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가 단순히 산업적 손실을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강조합니다. 기술 유출이 증가하는 현상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도전과 위협을 명확히 보여주며,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분야에서 유출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첨단기술 보호와 보안 강화가 국가 차원에서 긴급히 다뤄야 할 과제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정부가 기술유출 합동수사단 신설과 처벌 강화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조명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도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다만, 기술 유출 방지에 있어 기업과 연구기관의 역할, 내부 보안 체계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 사례나 구체적인 유출 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청자들이 다각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길 바랍니다. 배우 우정성과 모델 문가비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로서 아이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히면서 비혼 출산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실적으로 혼인과 관계 없이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의견과 부모로서의 양육에 책임을 다한다면 꼭 결혼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혼외자 규모와 인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뉴스리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유명 배우의 비혼 출산 인정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해 이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해 전했습니다. 비윤리적이라는 지적과 전통적 가족관 탈피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혼외자 규모가 이미 1만명을 넘어 지난해 전체 출생아 23만명 중 4.7%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40%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10년 전 22%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는데, 이러한 인식은 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춰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의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가과제로 저출생 위기가 떠오르면서 정부도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등을 테이블에 올려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비혼 출산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유명인의 사례를 통해 공론화했습니다. 전통적 가족관의 변

화와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는데요, 국내 혼외자 증가와 20대의 인식 변화를 언급하며, 비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며 미래지향적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도는 혼외자 비율과 인식 변화 등의 데이터를 통해 설득력을 더했으며, 프랑스 등록동거혼 제도를 사례로 제시해 제도적 대안을 논의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 가족 개념을 재평가하고, 비혼 출산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보도는 비혼 출산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납니다. 이에 따른 현실적 문제나 윤리적 논란은 충분히 다루이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 법적 환경에서 프랑스식 제도를 수용하는 데 따른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었다면 더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담은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4. 12. 08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8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모두가 놀라고 정신 없으셨을텐데요. 관련하여 연합뉴스TV에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취재하여 많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긴급했던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던 4일 새벽 <뉴스특보>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국방부 취재기자에 의해 현장에서 전달되었습니다. 기사는 국회의 결의안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방부 청사에서 별다른 동요가 없으나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일대에는 군과 경찰의 통제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날 내려온 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전했는데요, 계엄사는 이번 포고령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전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즉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당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따라 각군 주요 직위자들과 당국자들은 위치로 복귀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하고, 국방부 전 직원도 모두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

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당시 국방부는 아직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앵커와 기자 모두 침착하게 사실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포고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국방부 취재 기자로서 현재 국방부 관련자들의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연합뉴스TV가 유사시 뉴스전문채널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하고, 하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SNS에서도 연합뉴스TV를 언급하며 뉴스전문채널에서 직접 업로드한 뉴스가 아닌 경우에는 출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혼란 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글이 많았습니다. 본 보도에서도 보도 말미에 김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방부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당시 해당 이야기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보도는 이러한 분위기를 인지하고, SNS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등 당시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상황이 진행되는대로 현장 전달은 물론 전문가와 함께 전하는 대담까지 다양하게 보도되어, 시청자로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뉴스 관련한 의견입니다. 외국인 클럽에서 마약 사범들을 긴급체포한 내용에 대해 보도한 <뉴스리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모 클럽에서 200여 명의 경찰이 클럽 내부에 진입하여 무대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해당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을 급습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 출입구 이외에 또 다른 비상 통로를 만들어놓고 단속에 대비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손님과 직원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마약 투약자 1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클럽에서 필로폰이 함유된 탄산음료를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마약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본 보도는 경찰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마약 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을 잘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관련 보도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해야 하는 한편,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보도가 필요합니다. 본 보도는 한국기자협회나 식약처가 마련한 마약류 관련 보도 권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심각성과 체포 과정 등을 잘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목에서 사용한 '마약 파티'는 향후에는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파티'라는 긍정적인 용어를 '마약'과 함께 사용하여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앵커 멘트와 기자 리포트에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임에도, 기사 제목에 사용하여 시청자에게는 자극적인 보도로 느껴질 수 있어 아쉬움이 납니다. 다음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에 대해 보도한 <뉴스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경찰 특수활동비는 31억 6천만원입니다. 경찰 특수활동비는 사건 수사 중에서도 마약이나 성범죄 등 기밀이 필요한 위장 수사에 주로 활용됩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마약 사건 등을 수사하

기 위해서는 첩보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자료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무슨 돈으로 수사하라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초 경찰청 예산안에 반영됐던 특수활동비 31억원도 최근 3년째 동결됐던 상황에서, 특수활동비를 활용해야만 하는 수사의 범위를 더 넓혀 놓은 국회가 오히려 수사를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 보도는 예산안에서 삭감된 경찰 특수활동비에 집중하여 전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해당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인용한 의견에서 취재원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큰따옴표를 활용하여 직접 인용처럼 보도한 부분입니다. 간혹 취재원 보호 등의 이유로 취재원의 신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직접 인용처럼 보이는 큰따옴표 사용 보다는 간접 인용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떤 인물이 언급한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화면은 물론 기사 제목과 하단 자막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요. 향후에는 보다 명확한 보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식품 포장지 정보에 대해 보도한 <토요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포장지에 영양성분을 비롯해 원재료명과 소비기한 등 다양한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포장지 면적에 비해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푸드QR'을 통해 쉽게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푸드QR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비추자, 제품 안전 정보부터 조리법, 그리고 소비 기한이 지났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 회수가 필요한 식품도 QR코드를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작은 글씨의 식품 정보를 크게 확대해 볼 수 있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과 점자 변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본 보도는 식품 포장지에 도입된 QR코드에 대해 전했는데요. 식품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정보가 꽤 많습니다. 과거 많은 영역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지만, 불편함도 존재했습니다. 기자는 이와 관련하여 불편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하며, 도입된 QR 코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포장지를 예시로 보여주고, QR코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어 전달력을 높였습니다. QR코드의 장점도 요약해 정리하여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년 노동인구에 대해 보도한 <뉴스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쉬었음' 인구가 지난 10월 244만 5천 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청년층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쉬었음'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에 비자발적으로, 나머지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쉬는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쉬었음' 상태가 길어지면 노동시장에서 영

영 이탈하거나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니트족'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본 보도는 쉬었음 인구 가운데 청년층에 집중하여 보도했습니다. 세대별은 물론 과거 대비 비율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현재 노동시장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도 중간에 언급한 '니트족'의 경우 별다른 추가 설명 없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미 사용된지 오래된 용어이자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대다수의 시청자가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어는 영어 단어일 뿐 아니라 영어 줄임말로써 추가 설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비슷한 경우, 보도 리포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막으로 제공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4. 12. 15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8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8일 뉴스특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시사한 뒤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의 국정 운영 로드맵은 아직 정확하지 않으며, 야권에서 '위헌 통치' 라면서 통치권 논란도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해나가겠다.'며, 사실상 '2선 후퇴'를 시사한 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전면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것인지, 그 사이 누가 어떤 근거로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건지, 많은 부분은 오리무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례 당정 회동 방침 정도가 공개된 가운데, 야권에선 여당 대표와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다며, '위헌 통치'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권한의 공동 행사는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내각제'로 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도, 민주당은 총리가 군 통수권과 외교권 등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한 대표에 대해선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에게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사의가 수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야권에서 나왔는데요, 한 대표는 "사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엄 사태가 불러온 국정 난맥상 속에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제시할 정국 해법에 여야의 시각이 엇갈릴 거로 보인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 시사 이후 국정 운영 체제와 통치권 논란을 잘 조명했지만, 보완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2선 후퇴'의 의미와 그 배경에 대해 보다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둘러싼 해석의 다양한 관점과 국민 여론 전달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정책 방향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방송에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를 전달하면서 대립지점을 짚었는데요, 야권의 '위헌 통치' 비판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다뤄야 좀 더 균형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대표와 한 총리 정권 운영이 어떠한 헌법적 그리고 법

물적 근거를 가진 것이지, 그리고 이러한 통치는 국민의 뜻과 헌법에 기초하여 한 한다는 멘트가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헌법 전문가의 의견이 한 번 쬐는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8일 뉴스특보에서는 계엄령부터 탄핵소추 표결까지 국가 비상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데요, 탄핵이 무산된 가운데 금융시장 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를 보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던 지난주 코스피는 사흘 연속 하락했는데요, 외국인 순매도 종목은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종에 집중됐으며, 매도 규모는 지난 4일 2천551억원 등 사흘 동안 7천96억원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과상준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줄이고자 할 때 줄여야 되는 항목은 모든 주식을 조금씩 줄일 수도 있겠지만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수익을 냈던 은행 금융 증권 보험 쪽에 매도가 훨씬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주환원 정책이 후퇴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 외에도 금융업종이 국가 안정성과 비례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금융업 외 외국인인 거둬들인 투자금을 모두 합치면 사흘 동안 1조 85억 원 정도인데요, 외국인 매도세에 지난 사흘간 코스피는 267개, 코스닥은 686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주식시장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당분간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빠질만큼 빠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주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중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고착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는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가 비상사태와 탄핵소추 표결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전달하며, 현재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된 금융업종에 매도가 강하게 작용하는 원인도 인터뷰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주주환원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주식시장의 변화를 이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관련 배경과 앞으로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 논의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저가 기록, 원화 가치 하락 등이 실제로 개인 투자자나 실물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좀 더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의 긴급 경제대책회의 내용과 계획은 우선 간단히라도 언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3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지난 8일 아침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새벽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6시간의 강도 높은 밤샘조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되었는데요, 검찰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된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김 전 장관은 검찰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여부는 검찰의 이어지는 수사에서 드러나게 될 전망이라는데요, 검찰은 이미 국회 상임위 등에서 나온 계엄 관련 군 관계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진술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남은 시간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구성'과 계엄군 지시 주체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 중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요,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제가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 출석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도 알려졌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전화가 새로 바꾼 휴대전화로 전해지면서 우리가 한층 더 커졌는데요, "김 전 장관의 구속은 향후 워선으로 향한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체포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 과정을 상세히 다루며,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의 진행 방향을 강조한 점에서 중요한 정보를 잘 전달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진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계엄 사태의 실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데요, 계엄군 지시 주체나 체포조 구성과 관련된 진술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의 텔레그램 탈퇴와 휴대전화 교체 사실 등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한 것은 사건 파악을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적 절차와 증거인멸 혐의가 구속영장 발부에 미칠 영향 등은 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으로 뒷받침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가 계엄 사태의 '워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8일 뉴스프라임에서는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경제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관계장관 합동 성명을 발표하고, 내수를 회복시키고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문제 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의장이 지난 1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안 표결 등으로 논의가 사실상 '울스톱' 상태인데요, 최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 특별법' 논의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경제안정과 대외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을 향해서는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며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고, "필요할 경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 금융지원 방안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또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외투자자,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면서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최 부총리와 장관들은 합동 성명 발표에 이어 긴급 회의도 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최 부총리 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모이는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 이른바 'F4회의'도 열렸습니다. 탄핵 소추안 불성립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외환 시장에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따른 건데요, 금융당국은 금융투자 회장과 금융시장 긴급 점검 회의는 물론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 개최도 조울 중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탄핵 정국 속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과 주요 경제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보완과 개선으로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 특별법'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다면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 경제정책 진행과정에서는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 각 경제수장들이 모여 회의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소위 'F4회의'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거시경제·금융 현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위해 각 수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모습은 지금까지처럼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그나마 국민에게 위안을 준다는 멘트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4. 12. 22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8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콘텐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출연이 빈번해졌습니다. 과거에는 TV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들이 등장했다면, 이제는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까지 출연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콘텐츠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인권 보호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 13일 뉴스잇에서는 TV와 유튜브 등에 출연한 아동의 정서적 부담과 아동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방송 출연 빈도가 잦아지고 있지만 제도적 안정망 부족이 지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어린이들이 부부갈등 예능프로그램 출연 등 시청률 경쟁 속에서 받아야 할 기본적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TV와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미디어 채널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했는데, 최근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이들의 출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이 단순히 오락적 소재로 소비되지 않고 한 사람의 주체적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채널 출연 아동의 정서적 부담은 이들이 출연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아동 인권 침해 사례나 실제 출연자의 경험을 제시했다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해외의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을 참고해 대안을 제시해주었다면 시청자들이 폭넓은 시각으로 이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난 14일,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외신들도 탄핵안 가결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는데, 국회 안팎의 모습과 함께 탄

핵 가결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소식이 AP, 로이터, AFP 등 주요 통신사와 CNN,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 세계 주요 언론사들에서 신속히 보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표결 과정과 시민들의 집회 참여 모습을 생중계하고 비중있게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신들은 탄핵 가결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했는데, AP 통신은 지지율 급락과 여당 일부 의원의 입장 변화가 탄핵 가결의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했으며, 워싱턴포스트는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한국이 장기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역풍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혼란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은 탄핵 소추안에서 일본 관련 문구가 삭제된 점을 언급하며, 내정과 외교 혼선, 한일 관계 및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소식을 주요 외신들이 촉각을 세워 보도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실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각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보도 방식과 평가 등을 소개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각 언론사에서 이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국제적 환경을 분석한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가별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언론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의 지속성을 언급했고 일본은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시각의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방의회와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정황이 있어 많은 질타를 받았으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여전히 이를 확실히 제재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 16일 뉴스리뷰에서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최근 3년간 지방의회 243곳이 주관한 국외출장은 915건, 약 35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이 중 44.2%는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도는 낭비된 돈은 18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전하면서, 포토샵을 이용해 항공료와 좌석 등급을 조작해 비용을 청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출장비로 음주 관련 지출 사례와 외유성 일정이 포함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는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국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심심사위를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하는 방안 등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내년에도 수시 점검할 것이라는 권익위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 이 보도는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서 발생한 예산 낭비와 규정 위반 사례를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 국외출장을 둘러싼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도해 세금의 투명한 사용과 공직자의 윤리 의식 강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보도에서는 예산 낭비 사례를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 비용 청구 방식 등의 구조적 허점을 언급하면서 시스템적인 문제를 지적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무원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이 포함되는 등 심사 과정의 문제도 제기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도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달해 아쉬움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 연합뉴스TV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례나 문제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출장 보고서 작성과 내용에 대한 조사와 권익위의 발표 내용이 함께 전달되었다면 보다 깊이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발표 내용을 넘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심도있는 취재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18일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 위험성을 다룬 보도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동등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지난 18일 뉴스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지난 6월 발생한 아리셀 참사 사망자 대부분이 중국이나 라오스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산업 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8천 200 여 명, 사망자수는 100여 명에 달한다고 설명하면서, 불법 파견과 부실한 안전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내몰리는 원인으로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지적했는데요, 사업주가 이들의 고용과 체류를 좌우할 수 있게 되면서 위험한 일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은 근무 환경에 대해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고, 위험한 사업장을 떠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이들도 가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 처벌 항목까지 포함해 정부의 사업자 근로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를 조명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고용허가제와 같은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설명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와 관련된 수치를 통해 단순한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제도적 한계의 문제를 더욱 강조했는데요, 문제의 원인과 더 나은 고용 제도와 노동 환경을 둘러싼 규정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피해자인 이주노동자에 입장만 강조되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는 주체들의 반응이 배제되어 아쉬움이 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정부의 입장을 포함해, 시청자들에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

하고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4. 12. 29 방송) : <바로보는 TV 올부즈맨 68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정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정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2.3 계엄 수사 및 선관위 공방과 총리 탄핵 사안 이외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순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신속한 수사와 체포 영장 청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겨냥해 현수막 허용 기준의 '이중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유권 해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청문회는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26일 첫 여야정 협의체를 열고,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기 대선을 둘러싼 여권 내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계엄 사건 수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격화된 대립 상황을 집중 보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계엄 사태,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요구를 둘러싸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을 특검 시한으로 제시하고, 내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하며 갈등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요구를 '협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탄핵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당은 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해 명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라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여야의 갈등 상황과 특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의 상반된 주장과 각 정당의 대응, 민주당의 특검 추진과 국민의힘의 반발 입장을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균형있게 보도하려는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엄 사건 수사의 법적 쟁점, 헌법재판관 임명의 중요성, 선관위 논란의 배경 등을 다룰 필요가 있으며, 여야 갈등 보도에서 벗어나 전문가 의견이나 국민 여론을 반영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논쟁의 배경과 법적, 사회적 의미를 설명한다면 시청자들에게 사건의 맥락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 사건은 비단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및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외교 공백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민간외교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재선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측과 소통하며 민간 외교 역할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128개국 상공회의소 회장과 116개국 주한 외국 대사들에게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발송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현

대차와 LG그룹도 트럼프 2기 정부에 대비해 전략적 인사를 영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인 출신 트럼프가 기업인과의 협상을 통해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전통 외교를 넘어 민간 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간 외교와 관련된 연합뉴스 TV의 또다른 보도에 따르면, '미국통'이라고 불리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류 회장은 현재 참석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불리는 류 회장은 미국 기업인들뿐 아니라 정계 핵심 인사들과도 오랫동안 인맥을 다져왔습니다. 국내 기업의 민간 외교 활동은 한미 경제 협력 강화의 기회로써 비공식적 외교 채널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기업인 출신 배경과 민간 중심의 협상 선호를 고려할 때,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인맥을 활용해 양국 간 경제 협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탄핵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신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민간 외교 활동이 단순히 기업인의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외교의 중요한 축이라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양국 간 협력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내용이 보완된다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보도에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보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겨울 추위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까지 얼어붙을까 걱정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이어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는 여행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정부와 여행업계는 단체 방문을 기획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궁 앞마당에 한복을 차려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연합뉴스TV는 200명에 달하는 필리핀 단체 관광객들이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와 관광을 즐기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약 700명의 필리핀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올 예정이며,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동남아 시장을 공략해 관광객 유치와 마케팅 강화를 통해 회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는 정국 불안으로 인한 타계책의 일환으로 관광객 감소 우려 속에서도 단체 관광 유치와 콘텐츠 마케팅이 분위기 반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상계엄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으로 관광 수요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일부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주의보까지 발령하면서 여행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중장기적인 여행 및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는 동남아 방한 수요와 관광 산업 회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며,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 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부의 대안, 정치적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 전달,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관광 산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따라 내년 3월 학교 일선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발전 저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 개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가 자율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될 경우의 부작용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할 우려를 이유로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부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교육 평등 측면에서 특히 어려운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로부터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본회의 통과 전까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디지털교과서 채택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기술 격차를 줄일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충분한 기술 지원이 없을 경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 가시는 논쟁을 잘 전달했지만, 학습 효과의 장단점, 기술 격차, 디지털 의존성 완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성공·실패 사례 등의 보도가 추가된다면 더 큰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금,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4년 12월 1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12월 8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12월 15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12월 22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12월 29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Blank space for the second column of the third row.</p>